

“대입·취업 지역균형선발 법률 필요”

김승환 교육감 “교육부가 균형선발을 단순히 교육복지 관점으로 접근하는 건 문제 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13일 “대학입시 뿐만 아니라 취업에서도 지역균형선발이 필요하다”면서 새 정부에서 이에 대한 법률적 토대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부가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응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하면서 지방 의대, 치대, 한대의 지역 고교 출신 선발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를 교육복지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헌법 제31조 4항에 따라 대학은 학생선발의 자율성을 갖는다. 따라서 이 문제에 접근하려면 최소한 대의기관이 나서서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지방대 육성”과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동시에 고려하는 조화로운 해석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김 교육감은 “지역균형 선발은 매우 중요하다. 대학 입시 뿐만 아니라 취업에도 적용해야 한다. 새 정부에서 이에 대한 법률적 토대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야 대학 서열을 없앤다는 말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수역원대 급식비를 빼 돌려 학교를 떠났던 사립학교 교장이 최근 다시 복직할 데 대해 “아이들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현행 법률체계 하에서 해당 학교장의 복귀를 막을 장치는 없다”면



차량 탑승하는 이정미 권한대행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오후 퇴임식 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나서고 있다.

서도 “하지만 법적 비난 가능성을 면했다고 하더라도 도덕적 비난 가능성까지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육감은 “교육자에게는 양심이 필요하다. 그래야 아이들 앞에 교육자로, 교장

으로 설 수 있다”면서 “해당학교 법인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은 ‘제발 아이들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학교가 누구 위한 학교인

가”라고 묻은 뒤 “해당 학교법인은 현행 대한민국 법률이 말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교육공동체 앞에 도덕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그런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해은 기자

이해숙, 학교총장제·국정교과서 강행 교육부 규탄

교육부가 추진하는 국정교과서와 학교총장제가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한 정책이 아닌 박근혜 정권민을 위한 정략적·비교육적인 행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해숙 의원은 13일 제341회 임시회에서 학교총장제와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는 교육부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제안했다.

이날 이 의원은 “국민의 엄청난 촛불혁명에도 이 기간 가장 박근혜 정권을 옹호한 부처가 교육부”라면서 “교육부의 상식이하 국정교과서 강행과 학교총장제가 교육현장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갈등을 만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는 교육부가 도내 신규택지개발 지역에 수천세대 아파트가 들어섬에도 전체 학생 수 감소의 논리로 학교신설을 위해 구도심이나 농촌학교의 2-3개 학교 폐교를 주장하고 있어서다.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지만, 교육부는 이런 정책을 포기하고 지구 경제논리로 앞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교육부가 이처럼 정권논치보기를 넘어 불의한 정권의 하수인을 자칭하고, 우리 교육정책은 정권마다 장관이 바뀔 때 마다 수도 없이 조변석개로 바뀌어 국민 신뢰감은 바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 등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해 교육부의 폐지나 축소가 바람직하며, 국가독립기구로 ‘국가교육위원회’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해숙 의원은 결의안에서 “비민주적이고 반역사적이며, 박근혜 유신사관인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즉각 철회하고,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사태에 대해 국민과 교육계에 정중하게 사과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학교총장제는 우리 교육의 한계와 문제점을 의면하는 퇴행적인 정책”이라면서 “교육부는 신규택지개발 지역 학교신설을 허용해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주체간 갈등 해소 등으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학교신설 정책을 전면 개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민이 신뢰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을 위해 교육부를 대신하고, 정권으로부터 독립성이 강화된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을 적극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인재은 기자

朴 ‘불복 시사’에… 文·李 “헌법 모욕”, 安 “대연정”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은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에 사실상 불복 의사를 표한 데 대해 일제히 비판하면서도, 각론에 대해서 온도를 나타냈다.

특히 안 지사는 국회 차원의 ‘대연정’을 거듭 피력하며 차별화 시도를 이어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터문캠 일자리위원회 출범식’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결정에 승복하지 않은 것은 우리 국민과 헌법에 대한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대통령은 탄핵에 승복하지 않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지지자를 규합하고 있다”며 “단 하나의 적폐도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으며, 적폐세력 그 누구도 반성하지 않았다”고 박 전 대통령을 비난했다.

안희정 지사는 “사법적 대원칙과 정의는 권력자의 위치에 있던 것 벗어날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면서도,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대개혁·대연정·대통합을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를 이끄는 대통령은 의회와 높은 수준의 협치, 연합정부 구성 통해 국정 운영을 논의해야 하며, 촛불광장과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입법 과제들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개혁 주체들을 담은 바꾸니가 필요한데 그게 의회와 대통령의 협치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뉴스

‘탄핵불복’ 박 vs 검찰, ‘진검승부’ 펼칠 듯

朴 ‘수사불신→소환불응→법정투쟁’…檢, 이달 중 소환 “대선 영향 최소화” 속도

‘일반인’ 신분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며 향후 법적투쟁 등을 예고하고 나섰다. ‘최소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을 상대로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보인다.

검찰은 ‘불기소특권’에서 해제된 박 전 대통령을 이달 중 소환조사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13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 받아 자료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되면서 불기소특권이 사라진 만큼 수사에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사기록 검토를 마친 뒤 빠르면

이번 주내에 청와대 압수수색 등을 재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3월 중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도 진행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향후 검찰 수사 과정은 혐의 일체를 부인하는 박 전 대통령과의 ‘진검승부’가 될 전망이다. 수사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소환조사도 순순히 응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12일 저녁 청와대에서 삼성동 사저로 퇴거하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는 입장을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을 통해 전했다. 사실상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불복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은 향후 법적투쟁을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미 탄핵심판이 인용된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무죄’를 증명할 공간은 검찰 조사 과정과 기소 이후 재판 뿐이기 때문이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모두 13개의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검찰에서 적용한 혐의가 8개, 특검이 적용한 것이 5개다.

가장 굵직하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작용됐고,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을 통해 공무상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직권을 남용해 최순실씨의 사익에 도움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중 탄핵심판 인용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혐의는 공무상기밀누설과 일부 직권 남용 등 혐의다. 뇌물죄 등은 현재의 결정

문에 담기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공무상기밀누설, 뇌물죄 등 주요 혐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치적으로는 사망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향후 검찰 조사와 법원 재판에서 결백을 다투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소환조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현재 대통령 신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고려할 사항이 많지 않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르면 3월 중으로 소환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곧 대통령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빠르게 소환조사를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논란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통상 일반적인 피의자의 경우 소환통보를 두세 차례 진행한 뒤,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서는 것이 관례다. 이에 따라 이번주와 다음주 정도에 걸쳐 소환통보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이달 말에 강제소환에 나서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뉴스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두 번째 이야기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 등교시각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에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이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옥구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학교를 지켜주세요
행복한 교육 공동체

“아침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헌정 기정의 ‘보리밭’ 역할을 재임명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